IT'S FIRST BUTTON FOR REAL CHANGE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약화 요청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Korea Child Welfare Center Association

THE CHILREN
GO FIRST

FORE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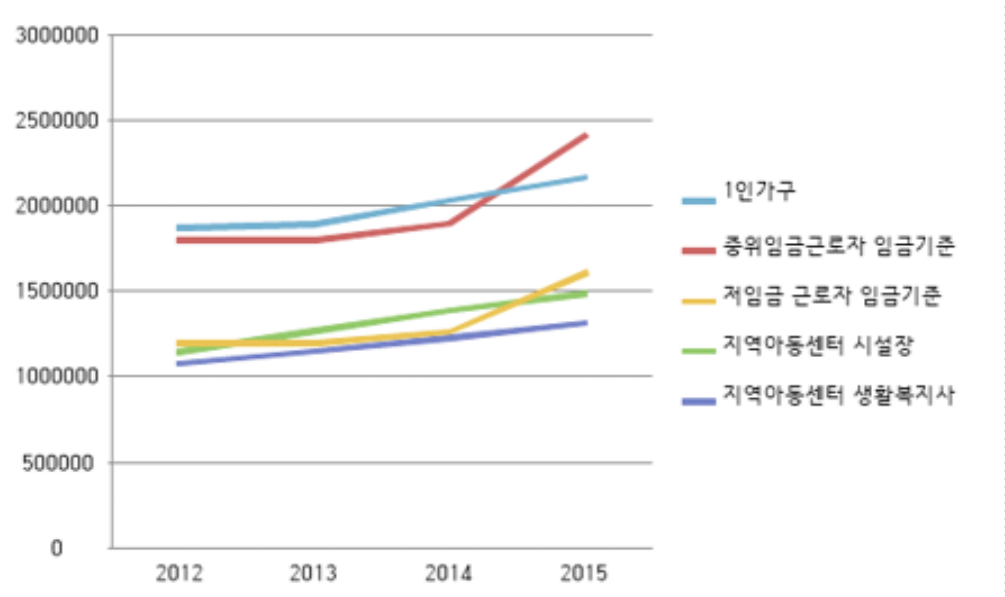
1924년 제네바 선언에 기초한 1959년의 UN아동권리선언은 전 세계 국가의 아동복지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으며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을 맺어 현재 전 세계적적으로 191개 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이 조약에 비준 하면서 학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는 국내법과 제도를 만들 책임을 지니게 되었으며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아동의 욕구에 상응하는 시설 운영의 방향을 정하고 운영 주체나 유형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인격 형성과 생활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관계를 공고히 하여 아동들이 낙인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노력이 요구된다.

보호 아동들은 근본적으로 원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 가족의 역할과 본질을 지키고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나 교육도 필요하다. 시설은 돌봄 대상 아동의 학교와 가정을 이어주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시설로서 가정 해체나 방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반면, 2004년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법제화 된 지역아동센터는 15년이라는 시간동안 매우 열악한 환경에 여전히 놓여있으면서도 방과 후 대상아동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대상) 돌보고 있다.

전국에 4,211개소, 하루 평균 9~10시간을 운영하며 28%는 야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약 11만 명의 아동들(평균 26.4명)을 위해 사회복지사(78%), 교사(7.4%), 보육(15%)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 시설장 8년 11개월, 생활복지사 4.2년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최저급여 수준에 하루 평균 9.5시간을 일하며 15년이 지난 지금 장기근속 시설장과 학교를 갓 졸업한 종사자의 급여 차이가 없다. 호봉제나 단일임금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통으로 제공되는 모호한 구조 때문이다.
이 모호한 구조는 저임금 일자리의 근로자 임금 기준보다 낮고, 1인 가구 근로자의 임금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FOREWORD

종사하는 이들의 전문성이나 직 군의 특성을 보면 여성이 90%에 육박하며 대졸 이상이 72%이며 대학원 졸업도 상당수다. 국가자격증(사회복지사 자격증 외 타 자격증 추가 확보 비율 95%)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되고 있다.

이에 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018년 단계별 2022년도 까지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현실화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에 이르는 지금, 그 약속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것도 시설장 목표 81%, 생활복지사는 100% 로 정했으나 정부 안은 물가상승률 외에 증액은 없었고 국회 예산 증액마저 실패하여 지금은 30인 이상 시설은 월 11여 만 원으로 큰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2020년 부터 법인시설을 필두로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고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비 분권화 시설이 지방정부의 분권시설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며 저 출산과 돌봄의 2대 장벽 (임신과 출산,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을 만나는 국민들의 고충을 두루 살피고 개선해야만 국가적 저 출산 위기를 돌파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아동 돌봄의 시대적 요구와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이자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후보자들의 공약에 담아 아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OREWORD

국회 입법부를 통해 아동복지법이 제정 (제52조 제1호 제8항)된 이후로 단 한번도 제대로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없으며 15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회 상임위도 여러 차례 좌절을 맛 보았다.

도시빈곤지역에서 시작된 공부방 운동은 IMF를 통해 가난의 심층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었던 이웃들을 살려내고 방임 및 방치되던 아이들을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돌봄으로써 실제로 국가 경쟁력의 가장 심층부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 왔던 지역아동센터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투자를 일구어 내야 할 때가 되었다.
양극화가 심해 질 4차산업시대, 그리고 다음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내일의 대한민국을 가꾼다는 심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먼저'인 세상,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한 세상, 그리하여 출산도 돌봄도 행복한, 아이 낳아 키울 만 한 세상을 만드는데 뜻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한다.
우리는 후보자들께 다음과 같이 공약화를 요청하며 내일의 대한민국을 귀 후보자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 약속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보다 더 날카롭게 그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넬슨만델라)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

본 공약 요청서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는 우리의 정책을 적용합니다.

관련 사안 문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1544-4196
홈페이지 http://hjy.kr
이메일 : hjy@hjy.kr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전 사회복지계 숙원 공약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Korea Child Welfare Center Association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3항에는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1.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서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관련된 종사자의 보수 향상 개선방안으로 '종사자 인건비 개선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 라인 준수 의무화, 사 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방안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방안으로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처우 균등화가 제시된 바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 2014년 8월,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권고의 건'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라고 결정하였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법률안 검토 보고(2017.8) : 2017년 6월, 윤소하 의원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조의 2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한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등은 보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신설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못 지키는 시설이 많고 임금체계 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실정으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준수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4. 공무원 수준으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노력 :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도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무원과의 격차가 얼마나 조정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평가 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다만, 해가 갈수록 그 격차 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를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생활시설과 이용 시설의 차별을 깨고 처우를 균등화 하도록 제시하였 다.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서울시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 휴가 제도도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국비지원 복지시설의 인건비를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고 2021년까지 국비지원시설에 단일임금체계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처우개선비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상은 536개 시설, 4,495명이다.

이미 단일임금체계를 적용 받아 온 시비 지원시설은 올해 인건비가 평균 3.88% 인상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95%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종사자 단체 연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증액, 장기 근속 휴가, 대체인력 지원 공개채용 원칙 강화, 표준 이력서 사용과 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 기준 등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2020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되었는데 국비지원시설 중 소외되고 있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천 관내 어디에 서 일하든지 동일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TF를 꾸려 운영하기도 했다.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운영을 하면서도 처우기준이 없어 최저임금, 호봉 경력 미 인정 등 열악한 조건에서 박탈감과 고단함 속에서 일한다며 인천시는 적극 본 예산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일임금체계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에 대하여 역대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근무여건과 교육훈련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공하겠다.' 고 발표했으며,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 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단일급여체계를 도입, 시행하겠으며,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국정과제를 통해 '민간_공공 사회 복지 인력 확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없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우선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첫째, 시설 유형, 지역별 인건비 지원체계를 개선해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둘째,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등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 나가고
셋째, 동일가치노동-동일처우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역시 이같은 원칙 하에 자신의 노동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돌봄 종사자 추가인력 배치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Korea Child Welfare Center Association

돌봄 종사자 추가인력 배치

1. 지역아동센터 돌봄 종사자 업무 현황

   방과 후 돌봄, 생활지도, 학습지도, 급식 및 급식지도, 장보기, 행정업무, 개인 관찰 및 상담, 학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보호, 교육, 정서지원, 문화), 지방의 경우 차량 운행(1~3시간),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 파견인력 수퍼비전, 3년에 1회 평가, 연 1~2회 지자체 점검, 개별아동관리, 수준별 교육 및 퇴소 아동 관리 등.

2. **평균 2.4명** (평균인원 : 26명)
   차량, 급식 지도까지 진행하면서 학교처럼 방학이나 공식적 휴원 없이 진행

3. **지역아동센터 인력 파견 현황** : 일자리 창출의 단기, 또는 제한적 업무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복지는 미래를 보장하는 투자로 이해해야 하며 사회적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됨. (종합적인 단기 일자리의 수요처 – 복지 대상아동을 위해 복지 대상자를 파견하는 현상)

4. 농산어촌의 경우 돌봄 종사자 증원 시급

   1일 차량 운행시간이 1~3시간 대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차량을 1~3회 운영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종사자 1명이 나머지 아동들을 돌봐야 하거나 차량 동승자가 없어 언제라도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차량 동승법과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는 아동의 사망사고와 안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문제임.
   예산문제로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민식이 법이 통과된 후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2019 지역아동센터 자유토론회 / 보건복지부, 학계, 사회복지계, 현장 전문가